

삼척 원전부지에 1조7천억 수소도시 추진

道, 국토부 초대형 공모사업 접수키로... 자금조달 계획도 마쳐
“정부 탈원전 정책 상징적인 지역 될 수 있어 지정 가능성 커”

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설 부지였던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·동막리 일원이 최첨단 친환경 수소도시로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.

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1곳, 내년 상반기 2곳의 수소시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 도에서 삼척시 근덕면 원전부지를 접수시키기로 한 것이다.

현재 정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오는 5월까지 수소도시 모델개발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기로 하고 다음 달까지 전국 지자체에 수소도시 수요조사 및 정부 제안을 요청한 상태다.

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말 삼척 원전부지를 수소도시의 시발점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 구상을 마친 후 올하

반기 공모에 참가한다는 방침이다. 삼척 원전부지에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생산도 하는 신개념 프로슈머형 수소타운을 세우고 스마트 광과 양식장, 수소기반 신에너지산업단지 및 R&D(연구개발) 등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. 특히 1조7,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3,0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자체+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1조4,000억원 가량을 확보한다는 자금조달 계획도 세웠다.

최정집 도 경제진흥국장은 “삼척

근덕 일원의 인구밀도가 낮고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다는 약점이 있으나 원전부지를 수소도시로 전환할 경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상징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정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한편 도는 11일 열리는 ‘더불어민 주당-강원도 여산정책협의회’에서 삼척 수소도시를 도의 혁신성장 신산업으로 보고하고 삼척 원전예정구역의 고시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.

최기영기자 answer07@kwnews.co.kr